

●법제처고시 제2026-5호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3회 국무회의 (2026. 1. 27.)에 보고된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법제처장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123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 전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4건
 - 일부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75건(61%), 정기국회(9월~11월) 기간 중 48건(39%)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법률안 수)												
소관 부처	국회제출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감사원							2							2
재정경제부										23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1				2	6
교육부	2						2							4
외교부								1		2	1			4
통일부	1									1				2
법무부			1					1						2
국방부							1		2	1	1			5
행정안전부			1				2		2		7	1	3	16
국가보훈부							1		2		1			4

문화체육관광부	1						4						5
농림축산식품부		1				1		1				2	5
산업통상부	1												1
보건복지부	1								1				2
기후에너지환경부												1	1
고용노동부					1	2		2	2			1	8
국토교통부								2					2
해양수산부	1					1		1	1		1	4	9
중소벤처기업부												1	1
인사혁신처						1		1	1			2	5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국가데이터처										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2	3
국민권익위원회						3		4			1		8
금융위원회						1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국가인권위원회										1			1
합 계	9	3	-	-	1	17	7	18	33	12	3	20	123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감사원(2건)						
1	감사원법	일부	○ 감사계획 의결 대상 명확화, 고발원칙 규정, 감찰관 외부인사 임용 규정 마련 등 ○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 법제화, 사전컨설팅 제도 법제화 신설 등	4월	6월	공포일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 제도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면책 근거 등 마련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4월	6월	공포일
□ 재정경제부(23건)						
1	국세기본법	일부	○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2	국세징수법	일부	○ 국세징수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3	세무사법	일부	○ 세무사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6	소득세법	일부	○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을 합리화하고,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7월	9월	27. 1. 1.
7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과세자료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9	증권거래세법	일부	○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0	교육세법	일부	○ 교육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3	부가가치세법	일부	○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4	인지세법	일부	○ 인지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5	개별소비세법	일부	○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상 발생한 주류행정에 관한 미비점 보완 등	7월	9월	27. 1. 1.
18	주세법	일부	○ 주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20	관세법	일부	○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21	관세사법	일부	○ 관세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2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유무역협정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7. 1.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건)						
1	원자력 진흥법	일부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기업연구자육성재단 설립 근거 신설 ○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설치 등 재원 조성의 법적 근거 신설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3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 디지털·AI 전환 가속화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9월	12월	공포 후 1년
4	전파법	일부	○ 주파수경매제도 왜곡 방지 및 성실 참여 유도 ○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가능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 성능·품질검사에 대한 행정형벌을 행정경제벌로 완화	'25. 11월	1월	공포 후 1년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 시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 개선	'25. 6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교육부(4건)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 교육관련기관의 시정명령·변경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3	교육공무원법	일부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사립학교법	일부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 외교부(4건)						
1	공공외교법	일부	○ 재외공관의 역할 확대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2	여권법	일부	○ 여권 발급 등 업무 수행시 타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확대 ○ 여권 사실증명 사무의 근거 조항 신설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외무공무원법	일부	○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 삭제 등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4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	○ 재외공관 공증업무가 외교부에서 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정비사항 반영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 통일부(2건)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이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존속기한(5년) 설정	7월	9월	공포일
□ 법무부(2건)						
1	(가칭)조정에 의한 국제적 화해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통해 도출된 서면상 화해합의에 중대한 형식적 · 실질적 흠결이 없는 한 집행력 부여	5월	7월	공포일
2	공소청법	제정	○ 검사의 직무범위,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권한통제 및 책임성 강화, 사법경찰관과의 협력관계 등 규정	1월	2월	10월
□ 국방부(5건)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인 군인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3월	6월	공포일
2	국군조직법	일부	○ 해병대의 독자적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해병대의 주 임무에 기존 상륙작전 외에 "도서방위 및 신속기동"을 추가	6월	8월	27. 1. 1.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 법상 '국방연구개발'의 정의에 軍 주도 시범사업을 추가하여 軍 주도 시범사업에도 방위사업 계약 적용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지원사업 시설 설치 승인 권한은 대부분 지자체장에게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승인권자에 지자체장 추가 등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수출산업협력 지원 관련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행정안전부(16건)						
1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 비공개 사유 판단기준의 명확화·구체화 ○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청구 방지 ○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통지기간 현실화	5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도로명주소법	일부	○ 묘지 등 사용자가 특정한 위치에 주소 부여 제도(사용자주소) 도입 등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3	지방공무원법1	일부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헌법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 법안체계를 개편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각급 법원의 설치, 지방행정 특화단지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8월	10월	공포 후 1년
5	(가칭)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제정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이양이 필요한 권한·특례 발굴 시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근거 마련	7월	8월	공포 후 1년
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 지원, 스마트제조 혁신기업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청년농업인 지원 등 특례 등 신설·정비	8월	11월	공포일
7	(가칭)제3차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 장기미이양 사무, 국정과제 핵심분야 대상 이양사무 발굴	10월	12월	공포 후 1년
8	지방세기본법	일부	○ 납세의무 확정, 승계, 환급 제도개선 등 과세 형평성 제고, 불복청구·경정청구 등 납세자 보호, 세무조사 등 과세권 강화, 과세정보 및 과세자료 관리 등	9월	10월	27. 1. 1.
9	지방세징수법	일부	○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 징수유예, 납부방식 등 납세편익 제고	9월	10월	27. 1. 1.
10	지방세법	일부	○ 지방세입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각 세목별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 형평성 제고	9월	10월	27. 1. 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26년 일몰도래 예정 감면 정비·신설 ○ 감면제도 개선	9월	10월	27. 1. 1.
12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9월	10월	27. 1. 1.
13	(가칭)사회재난 대책법	제정	○ 특정관리대상지역, 국가핵심기반, 다중 운집시설 관련 사항,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사전 대비태세 확립, 국가·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 규정	3월	6월	공포 후 1년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4	민방위기본법	일부	○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민방위기본법」상 '소년보호직공무원' 명칭 변경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5	지방공무원법2	일부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확대 등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6	(가칭)중대범죄 수사청법	제정	○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조직, 직무범위, 인사체계, 운영기준 등	1월	2월	10월
□ 국가보훈부(4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일부	○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수교육확대 규정마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등 ○ 공무수행사망자의 현충원 및 특수임무유공자 호국원 안장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직급 변경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보훈 장애인단서 활용범위 확대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의 신청을 본인의 신청으로 간주(1회 한정)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문화체육관광부(5건)						
1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1	일부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설계승인 시 관련법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조항 삭제 등	5월	7월	공포일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행위허가 시 수리법에 따른 설계승인 (보존처리계획승인) 의제 조항 신설	5월	7월	공포일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행위허가 시 수리법에 따른 설계승인 (보존처리계획승인) 의제 조항 신설	5월	7월	공포일
5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2	일부	○ 초·중·고 학생 대상 도박예방교육 연 2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예방교육 강사 배치·활용에 대한 지원과 권고 사항 명시	5월	7월	공포일 등
□ 농림축산식품부(5건)						
1	가축전염병 예방법1	일부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이동제한·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범위 조정 등	'25년 11월	2월	공포 후 6개월
2	가축전염병 예방법2	일부	○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 가금 사전입식신고 변경 절차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전통주 관련 과세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 마련,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전통주 교육기관 사후관리 보완 등	4월	6월	공포 후 1년
4	(가칭)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 동물 관련 법률을 포괄하는 동물복지 이념을 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기금 설립근거 마련 등	10월	12월	공포 후 1년
5	수의사법	일부	○ 장관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동물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산업통상부(1건)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	○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 보건복지부(2건)						
1	의료법	일부	○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가칭)예방접종 관리법	제정	○ 예방접종 효과 평가 등 과학적 근거 기반을 신설하고 예방접종 체계 전반에 대하여 제도 정비	8월	9월	공포 후 1년
□ 기후에너지환경부(1건)						
1	(가칭)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수도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자,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등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추소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고용노동부(8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¹	일부	○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규범적 관점에서 고려함을 명문화	3월	5월	공포 후 6개월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	○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 및 체계적 수급설계를 위한 근거 마련, 도입 ·관리체계 개선 및 장기근속 지원 권익보호 강화 위한 사업장변경 요건 완화 등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고용보험법	일부	○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등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²	일부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면 적용 등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¹	일부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 및 징수방법, 보험료 등 규정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²	일부	○ 두루누리 산재보험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1년
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월	8월	공포일
8	근로기준법	일부	○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과 같이 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개정 * 형법 및 모자보건법 연계	10월	12월	공포일
□ 국토교통부(2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 규제 재검토 규정 정비	6월	8월	공포일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 규제 재검토 규정 정비	6월	8월	공포일
□ 해양수산부(9건)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25년 12월	1월	공포일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 수립대상 및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위험물 하역 신고제 도입 등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신설, 기존 내항선 외 외항선도 병커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겸업허용, 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 영업구역 제한 해제 등	6월	8월	공포일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탄소흡수원의 개념, 국가등의 책무, 조사 및 정보체계, 연구 및 기술개발 센터 설립 및 지정, 탄소흡수원 지정 및 관리 등 블루 카본 정책 추진 근거 조항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5	어선법	일부	○ 어선건조개조업 변경등록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추가할 필요	7월	9월	26. 12. 21.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를 행하는 것에 관한 법률	일부	○ 무허가 조업,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허가 제한조건 위반, 정선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금 상한액 상향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로 현행화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 외부감사 전문가 요건 명확화,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수협에 대해 상임감사 의무선임제 신설 및 상임이사 임기 조정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 증거조사에 대한 절차 명확화,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중소벤처기업부(1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을 기술개발제품 '성능확인'으로 용어 변경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인사혁신처(5건)						
1	공직자윤리법	일부	○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등	5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국가공무원법1	일부	○ 공직적격성평가 실시 및 결과활용 지원 등 공공분야의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 규정 마련	7월	8월	공포일
3	국가공무원법2	일부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헌법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 재해보상심의회(1심) 위원 수 상한 (100명 이내→200명 이내) 확대 ○ 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위원 수 상한 (50명 이내→75명 이내) 확대	8월	9월	공포일
5	국가공무원법3	일부	○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본인 동의 없는 강임 도입 ○ 육아휴직 사용 대상연령 확대 등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식품의약품안전처(1건)						
1	의료기기법	일부	○ 식약처 또는 지자체의 시정명령 발령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보고의무 부여 등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데이터처(1건)						
1	통계법	일부	○ 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식별자료 제공 및 행정자료 입수 확대, 실험적통계 제도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총괄·관리 강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건)						
1	(가칭)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	제정	○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 마련 ○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1년
2	전기통신사업법1	전부	○ 디지털·AI 전환 가속화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면 개정 추진 ○ 통신 역무 개편, 각 역무의 성격에 맞는 규제 합리화 내용 반영 등	9월	12월	공포 후 1년
3	전기통신사업법2	일부	○ 통신시장 이용자 선택권 강화(집합건물에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 이용 강요 행위에 대한 통신사 관리 책임) 등	8월	9월	공포일
□ 국민권익위원회(8건)						
1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일부	○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 ○ 피신고자의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불이익추정사유 확대 등	'25년 12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 확대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 등	'25년 12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일부	○ 자료요구권 확대 및 이행강제수단 마련, 송부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강화 등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처벌 수준 상향,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원 소속기관 고발의무 명시 등 ○ '적법·타당한 적극적 직무수행'을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으로서 규정 ○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 집단 고충민원 조정기능 강화,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확대 특이민원 관련 규정 마련 등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등
4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제도 운영과 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준법감시 전담부서 지정을 통해 부패예방 및 관리 역량 집중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 처벌 강화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벌칙 수준 상향 등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6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일부	○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법인의 확인·관리, 허위·불성실 이해충돌 신고자 과태료 부과 등	5월	8월	공포 후 6개월
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분할납부 제도 신설 ○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신고자 보호 관련 처벌 강화 ○ 위원회의 환수 등 권고 미이행 시 공공기관의 소명 의무화 근거 마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8	(가칭)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	○ 학생, 기업 등 민간분야 청렴교육 및 공직자 권익구제, 갈등관리 교육 강화 ○ 정책연구·개발 등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기능 강화	8월	11월	공포 후 1년
□ 금융위원회(1건)						
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등 금융지주제도 개선	'25년 7월	6월	공포일
□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1	원자력안전법	일부	○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업자 책임 규정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인권위원회(1건)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 대통령의 임명권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 ○ 공시송달 제도 도입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중기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연 번	소관 부처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행정 안전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지정기록물 제도 운영 개선, 선물 제도 개선, 대통령관련기록물의 수집, 대통령 기록정보의 공유 등	11월	'27년 3월	공포 후 6개월
2	행정 안전부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개정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질적 자치입법권 도모 ○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자원보전 특례 등 신규 발굴 특례 반영 추진	12월	'27년 3월	공포일
3	행정 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전부	○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률체계 정비 및 용어 순화	12월	'27년 3월	'28. 1. 1.
4	원자력 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	○ 위험도에 따른 건설·운영 허가 체계를 개편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분리	12월	'27년 3월	공포 후 1년